

AI·환율·금리 삼중 악재… 외인 16조 이탈, 산타랠리 ‘흔들’

SK하이닉스·삼성전자 집중 매도 원화 약세로 외국인 수급 불안 금리부담에 성장주 약세 이어져 개인 매수 유입되며 지수 방어 연말 랠리 기대감 약화 기조

‘코스피 5000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증시를 가파르게 밀어 올렸던 외국인 투자들이 돌변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11월 한 달간 유가증권시장에서 16조 3530억원을 순매도했다. 월간 외국인 순매도액으로는 역대 최대다. 최근까지도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한국 증시 가리레이팅(재평가)되고 있다” “코스피 6000도 가능하다”고 하더니, 왜 돌변한 걸까. 12월 ‘산타 랠리’는 물 건너간 것일까.

◆외국인 빙자리 개인이 메워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연간 기준으로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2조 7028억원 순매도 했다. 11월 한 달간 16조원 넘게 팔아치운 영향이다.

‘AI(인공지능) 거품론’이 주범으로 지목된다. 10월 24일(미국시간) 구글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제미나이 3.0이 인공지능(AI) 산업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



ChatGPT로 생성한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는 외국인 투자자’ 이미지.

하면서 기술주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거품 우려는 여전하다. 같은 달 4일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최고 경영자)는 홍콩 금융 서밋에서 “기술주 거품이 상당해 향후 12~24개월 내 주식 시장이 10~20%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테드 피 모건스탠리 CEO도 “10~15% 조정은 오히려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했다.

실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SK하이닉스

와 삼성전자에 집중됐다. 외국인들이 이달 가장 많이 판 종목은 SK하이닉스로, 10조 446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삼성전자 순매도액도 2조 2642억원으로 둘째로 많았다.

환율 급등(원화 약세)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29일 새벽 2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90원 오른 1466.80원에 마감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춤했지

만, 최근 한달간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주요국 통화 중 절하율 1위를 기록했다. 헤지펀드 등 외국인 단기 투자 자금은 환차손에 민감하다.

최근 국고채 금리 급등 현상도 주식시장엔 부담이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28일 3.344%로 마감했다. 장기 금리 상승은 성장주나 고평가된 기술주의 할인율을 높이기 때문에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한다.

외국인의 빙자리는 개인이 메웠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달 코스피 시장에서 10조 9396억원어치를 사들이며 외국인의 매물을 대거 받아냈다. AI거품 우려 등으로 증시가 하락한 틈을 매수 기회로 삼은 것이다.

◆금리인하·AI기대감, 산타 랠리 오나

12월 산타랠리는 물 건너간 것일까. 전문가들은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될 것으로 본다. NH투자증권은 12월 코스피 상단을 4200으로 제시했다. 나정환 NH 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으로 소비 확대감이 커진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구글의 ‘제미나이 3.0’ 발표 이후 AI 버블 논란이 진정되면서 박스권 흐름을 이

어가던 코스피 지수도 반도체 등 AI 인프라 관련 업종의 실적 모멘텀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시장을 짓눌려왔던 투자심리를 회복시킬 두 가지 핵심 요인이 동시에 해결되는 모습”이라면서 “선물시장 기준 12월(미국) 금리 인하 확률은 80%를 상회하며 유동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고, 구글의 제미나이 3.0 공개로 새 성장동력이 가시화하며 AI 우려도 잣아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산타의 선물’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먼저 도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글로벌 유동성 안정화와 개인 순매수 유입이 기대되는 지금, 코스닥 랠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전략을 권고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법개정안도 긍정적이다. 여야는 지난 28일 5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시장에서는 증시 활성화와 ‘부자 감세’ 비판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약가 인하 앞두고 제약업계 ‘속내 갈림’… 혁신형 우대에 입장차 뚜렷

정부, 제네릭 약가 40%대 인하 추진 혁신형·R&D 비중높은 기업우대 확대 제네릭 중심 중소사는 ‘직격타’ 우려 대형·중소 제약사 간 이해 차이 심화

정부가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에 나서며, 제약업계가 2012년 이후 또 한번의 중대 전환기를 맞았다. 정부는 제네릭(복제의약품)에 의존한 매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신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지만, 당장 손실을 마주해야 하는 기업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일단 업계는 대처책에 서기보다는 상황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구개발(R&D) 중심의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분명한 우대가 주어지는 만큼, 기업들 간 대응이 첨예하게 나눠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28일 보건복지부는 ‘제22차 건강



Chat GPT로 생성한 정부가 복제약 약가인하와 혁신 성과 도출을 표현한 이미지.

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내 제약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편을 공식화했다. 이번 개편은 혁신 신약에 대한 보상 강화와 제네릭의약품의 약가 관리 합리화가 핵심이다.

향후 2026년 하반기부터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 2012년 제네릭 및 특허만료 신약의 약기를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80%에서 53.55%로 인하한 이후 13년 만의 대대적인 수술이다. 다만, 2012년과 달리 이번 약가 인하는 내년 1분기부터 조정에 착수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즉각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비대위는 우선 “주가적인 약가인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 우수 인력 확보 등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개선방안의 확정에 앞서 산업계의 합리적 의견 수렴과 면밀한 고급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개별 기업들의 속내는 복잡한 상황이다. 이번 약가 제도가 ‘채찍’만큼 ‘당근’도 명확한 만큼 일방적인 입장 정

립이 쉽지 않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혁신 기업에 대한 혜택은 강화했다. 혁신형 제약사가 첫 제네릭을 등재할 경우 가산 기간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 비용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제네릭 약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매출 대비 R&D 비율이 상

위 30%인 기업은 제네릭 약기를 오리지널의 68%까지 적용받는다. 또한 오는 20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현행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

한 제약기업 관계자는 “오리지널 제품을 갖고 있는 기업들엔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제네릭 비중이 높은 경우엔 큰 타격이 미치는 등 여건에 따라 입장이다를 것”이라며 “오히려 중소 제약사들의 대형화로의 구조개편을 유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13년 전과 비교하면 R&D와 신약개발에 공들이는

기업들이 많아졌고, R&D 생태계가 필 요하단 공감대는 훨씬 큰 상황”이라며 “산업 전반의 타격을 받는다는 부담감은 모두에게 있지만, 개별 기업들 간의 차이가 분명히 나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비대위의 고민도 깊어졌다. 이번 개편안의 명분이 확실한 만큼 정부의 반기를 들기 쉽지 않은 터이다. 회원사들 가운데 대형 제약사와 중소 제약사의 입장이 달라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비대위 관계자는 “신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동의하기 때문에 무작정 반대를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다만, 회원사들 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은 잘 조율해 전달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려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오너 2·3세 전진·AI전환 강화… ‘미래형 인사’ 돌입

» 1면 ‘롯데·신세계 칼바람…’서 계속

안정 유지하며 체질 개선 박차 조직 슬림화·미래전략팀 확대

현대백화점그룹은 주요 계열사 대표를 유임시키는 한편 민왕일 부사장을 현대리바트 사장으로 승진시켜 수익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대리바트가 올해 3분기 매출 3046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 하락

하며 부진하자 나선 조치다.

편의점 양강인 GS리테일과 BGF리테일도 호실적을 바탕으로 안정을 택했다. 양사는 민생회복 쿠폰 수혜를 입으며 3분기 실적 회복에 성공했다. GS리

테일은 취임 1년을 맞은 허서홍 대표 체제에 힘을 실으며 큰 변화 없이 임원 인사를 마무리했다. BGF리테일 역시 민승배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며 조직 안정화를 꾀했다.

◆7080·여성 부상… 오너 ‘전진’

이번 인사의 또 다른 특징은 세대교체와 여성 인재의 약진이다. 롯데와 신세계뿐만 아니라 CJ, 현대백화점 등 전 그룹에서 1970·80년대생 리더들이 경영 전면에 등장했다.

CJ그룹은 CEO 교체 폭은 크지 않았지만, 신임 임원의 45%를 1980년대생 이후 출생자로 채우며 ‘젊은 CJ’로의 체질 개선을 가속화했다. CJ그룹은 신임 임원 중 여성 임원이 11명으로 역대 최대 비율인 27.5%를 기록했다. 롯데는 신

동빈 회장의 장남이자 39세인 신유열 부사장이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CJ는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미래기획실장이 미래기획그룹장을 맡게 된다. 기업의 중장기 성장 계획과 신사업을 총괄하며 그룹 내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유통업계는 효율성을 중점에 둔 조직 개편과 AI 도입으로 미래 기술 발전에 나섰다. 비대해진 조직의 군살을 빼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롯데그룹은 옥상옥 지적을 받아온 지

주사 내 ‘헤드쿼터(HQ)’ 체제를 전격 폐지하고 계열사 책임경영을 강화했다. CJ그룹 역시 지주사 조직을 통합·재편하여 중복 업무를 없애고 의사결정의 단계를 줄였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조직 신설도 이어졌다. GS리테일은 DX(디지털 전환)본부를 ‘AX(AI 전환)본부’로 격상해 AI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낼 전망이며, BGF리테일은 전략혁신부문 직속으로 운영하던 BI(경영 혁신) 팀을 미래전략팀으로 개편해 리테일 테크 등 데이터 기반 역량 강화에 나섰다.

/손종욱 기자 handbell@